



시온주의의
위기
4~5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 현황
3면

레바논
저항의 역사
6~7면

레바논
해방의 전망
8~9면

KT 6000여 명
대량해고 계획 유출
11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관련 논쟁
14면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 승리 16면

시온주의자들은 위기를 겪고 있고 레바논인들은 이길 수 있다

관련 기사 3~9면





사진 제공 서울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

서울대 학생들,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폐쇄를 요구하다

“시온주의 거짓말 퍼뜨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식이 열리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앞이 시끌벅적했다. 서울대의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 설립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서울대 당국은 2023년 10월 13일 센터를 설립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인종 학살을 시작하던 때였다. 심지어 서울대 당국은 올해 6월 18일에 센터 개소식까지 열었다. 서울대 학내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포스터를 훼손했던 이스라엘인 음대 교수가 축하 공연을 했다.

항의 시위를 주최한 서울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은 “서울대가 어느 편에 서기로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규탄했다.

“[센터는] 시온주의 역사관을 정당화하고, 친이스라엘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이스라엘 사회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기관으로서 즉각 폐쇄돼야 한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양한 구호가 적힌 팻말을 만들어 들었다.

“시온주의 거짓말 퍼뜨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서울대의 교훈 ‘진리는 나의 빛’을 고집은 구호)

“COLONIAL SNU is BACK”(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점령에 복무한 경성제국대학 시절로 회귀한 것이냐는 뜻이 담긴 구호)

“NO Place for ZIONISM here”(이 곳에 시온주의가 설 곳은 없다)

수박 공동의장 이시현 씨는 이렇게 말했다.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수박 회원들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 우리는 구호를 외치며 유홍림 총장을 맞아 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유홍림 총장을 향해 찌렁 찌렁하게 외쳤다. “유홍림, You can't hide! You're supporting genocide!” (“유홍림 총장 당신은 숨을 곳이 없다! 당신은 인종 학살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 지난 학기 세계를 휩쓴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운동의 구호를 서울대에 맞게 변안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자금 출처 공개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시온주의 단체인 ‘더펠로

우십코리아’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펠로우십코리아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를 조직하고 구 소련 지역의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정착시키는 일에 재정 지원을 해 온 시온주의 단체 더펠로우십의 한국 지부입니다. 이에 수박이 이스라엘교육센터 운영과 재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학교 당국은 거부했습니다.”(수박 회원 이시현 씨)

학생들은 건물 외벽에 “학살 국가 이스라엘 거부한다”, “시온주의 옹호 센터 폐쇄하라” 하는 구호가 적힌 기다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팔레스타인인 유학생이자 수박 공동의장인 주마나 씨는 간밤에 가자지구의 알아크사 병원을 폭격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규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대 당국이 “이

스라엘의 다문화 정책 및 교육, 평화 교육 등을 배워야 한다”며 센터 설립 취지를 밝힌 것을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는 데다가 레바논까지 침공한 마당에, 이스라엘로부터 무슨 ‘평화 교육’을 배운단 말입니까?”(이시현 씨)

“이스라엘의 교육을 연구하는 게 과연 대학의 본연의 가치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한국외대 동아리 왼쪽날개의 서성원 씨)

개교 기념식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은 쉬지 않고 구호를 외쳤고, 항의 시위는 두 시간 넘도록 계속됐다.

이시현 씨는 이날 시위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300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수업 듣던 제 친구도 구호 소리가 엄청 잘 들렸다고 했어요.

“총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시위를 하자고 제안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호를 외치며 총장을 기다렸고 그를 쫓아가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은 효과적인 행동이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의 문제점을 계속 알리면서 다음 행동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평화 교육을 배운다고? 어불성설!

이재혁

이스라엘 군대는 대레바논 전에서 실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폭격하고 있다. 10월 13일(이하 현지 시각)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모스크와 시장 폭격 장면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광경이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지난 9월 레바논 공격을 확대한 뒤로 레바논인 최소 164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레바논인 2255명이 사망했다.

미국 등 서방은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에서 전쟁을 확대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실제로는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동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작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동 지역과 주변 해역에 병력 4만여 명과 군함 10여 척을 전개해 놨다.

지중해 동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선이 됐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은 백악관보다 2.5배 큰 매머드급이다. “미국이 중동에 남아 있겠다는 강력한 신호다.”(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 <민들레> 2023년 5월 15일 자에서 재인용)

미국이 중동에 “남아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의 최대 소비국이다.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쿠릴라는 레바논 삐삐 테러 발생 며칠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헤르지 할레비를 만났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한 레바논과 이란의 위협 등 현재 위협에 초점을 맞춘” 만남이었다.(<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9월 9일 자) 이 만남에서 쿠릴라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작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하마스의 공격 1년이 되는 날인 10월 7일 네타냐후는 내각 회의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전쟁, 즉 ‘부활

의 전쟁’이다. …

“우리는 이 지역의 안보 현실을 바꾸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모두 완수할 때, 즉 하마스의 사악한 지배를 타도하고 납치된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낼 때 우리는 전쟁을 끝낼 것이다.”

네타냐후의 연설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봉착한 교착 상태와 찾고 있는 탈출구를 둘 다 보여 준다.

지중해에서 요르단강까지 식민 정착자 국가 이스라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대대이스라엘 프로젝트”) 지속적인 전쟁을 통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동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인질들은 전쟁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고 아마 죽어서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조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아이언돔을 뚫고 텔아비브까지 날아올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포대와 미군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이란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레바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더 많은 이스라엘인들을 대피소로 보내고 더 넓은 북부 국경 지역 이스라엘인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위협하면서 천하무적임을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헤즈볼라가 오늘날과 같은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1982~2000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에 맞서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군은

2000년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했고, 5년 뒤 가자지구 정착촌에서도 철수했다.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을 상대로 다시 일으킨 전쟁에서도 패배했다. 지금처럼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게 아닌데도 말이다.

지금 이스라엘군은 난항을 겪고 있다.

10월 2일 이스라엘 군대는 레바논 남부에서 경찰 작전을 수행하다 헤즈볼라의 총격을 받아 8명이 전사하고 전차 3대가 전파됐다.

10월 7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하ifa 항구로 로켓을 발사해 이스라엘인 사상자가 25명 발생했다.

10월 13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비냐미나 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이스라엘 군인 4명이 전사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공격으로 총 61명이 부상당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제국주의와 독재 정권에 맞서는 대중 반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난항 때문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상전에 4번째로 사단 병력을 투입했다. 이미 배치된 3개 상비군 사단 병력에 예비군 사단을 추가 투입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군은 해상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곧 헤즈볼라의 테러 활동에 대응해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레바논 남서부인 아왈리강 남쪽 해안가를 피하라고 경고했다.

애초 ‘제한전’을 표방했음에도 전황이 이스라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유니필)을 공격해 5명이 부상당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절대적으로, 확실히”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을 요

청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 무기와 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유니필 공격은 미국 등 서방이 이스라엘의 갱스터 같은 행태에 직면해 곤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 서방의 중동 이익을 지키려면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하지만, 중동 경비전 이스라엘은 리드줄을 마구 잡아당기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에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다. 서방 제국주의의 지배가 크게 혼란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10월 7일 이스라엘 지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무기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제국주의의 뒷마당인 레바논이 “새로운 가자”가 되도록 놔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요르단 정권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보루다. 지난 4월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미국 전투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팔레스타인·레바논 연대 시위로 인해 요르단 정권은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요르단 외무장관 아이만 사파디는 10월 7일 베이루트를 방문해 이스라엘의 침략을 반대하고 레바논에 전폭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파디는 13톤의 식량, 구호 물자, 의약품, 의료 장비 등을 실은 군용기를 타고 베이루트로 갔다. 9월 18일 삐삐 테러 이후 요르단이 레바논에 보낸 7번째 구호 물자 수송이다.

결국 이스라엘 국가안보위원회 전위원장 지오라 에일란드는 이렇게 인정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총격을 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 두 전선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치적 해결의 문을 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 압박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믿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알자지라, 10월 8일 자)

김인식

이스라엘의 식민 정착자 지배가 위기인 이유

롭 퍼거슨 유대계 혁명적 사회주의자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인종 학살을 벌인 지 1년이 지나고 레바논까지 침공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무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온주의 프로젝트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스라엘 사회는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8월 말 이스라엘인 50만 명이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적인 “노동 조합”은 총파업을 벌였다. 이스라엘 국가와 군사 기구까지 분열해 있다.

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파괴하지 못했고 가자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방안이 없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레바논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82년과 2006년에도 레바논을 침공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저항 세력들이 지지를 얻고 다시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다.

지난 76년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고, 중동에서 스스로의 안정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테러 국가라는 사실을 가려 주던 위장막이 갈가리 찢겨 날아갔다.

시온주의 프로젝트는 삼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 첫째, 식민 정착자 국가 내부의 위기가 있다. 둘째, 중동 내 제국주의 질서의 위기가 있다. 셋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굴복시키지 못하면서 생겨난 위기가 있다.

이스라엘 건국자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유대인만으로 이뤄진 정착자 국가를 세우려 했다. 이를 위해 1948년 ‘나크바’라는 대규모 테러를 통해 팔레스타인인 75만 명(인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꺾지 못한 탓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고, 중동 내 제국주의 질서도 위기를 겪고 있다

80퍼센트)을 인종청소했다.

다른 정착자 국가와 달리, 이스라엘 건국자들의 목적은 팔레스타인 토착민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몰아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인 문제”를 일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48년 이후 이스라엘 인구의 20퍼센트 정도가 팔레스타인인이었고, 그 비율은 새 정착자 유입 물결들이 일면서 11퍼센트까지 줄었다. 이스라엘은 군사 지배와 탄압, 이등 시민으로서 사회 구조에 일정 수준 포섭하는 것을 통해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이런 ‘기존 질서’가 무너졌다. 1967년 ‘6일 전쟁’으

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인이 100만 명 넘게 살고 있었고, 그중에는 나크바 때 피난 온 이들도 있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지 닷새 후에 외무장관 압바 에반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강점 지배하는 것은 “드럼통 폭탄”을 끼고 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동료 장관들에게 경고했다.

“드럼통 폭탄”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낸 땅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온주의 프로젝트는 오늘날 600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 인구에 맞서 상시적 계엄 상태에 놓이게 됐다. 그 팔레스타인인 인구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에 거의 맞먹는다.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이끄는 갈수록 거세지는 무장 투쟁에 직면했다.

1982년 이스라엘은 PLO와, 그들과 동맹한 무슬림과 좌파들을 분쇄하려고 레바논을 침공했다. 수만 명이 살해됐고, 여기에는 레바논 내 이스라엘 대리자들이 사브라·샤틸라 난민촌에서 학살한 3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 난민도 포함된다.

그러나 5년이 채 안 돼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제1차 인티파다라는 새로운 형태

로 분출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반란을 가라앉히고자 미국은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을 중재했다. 오슬로 협정은 PLO를 포섭해 팔레스타인 당국(PA)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배 체제에 부역하게 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라는 신기루가 사라지면서 2000~2005년 제2차 인티파다가 분출했고 그 후 하마스가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해 충격을 줬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2008년, 2012년, 2014년, 2018~2019년에 거듭 공격해 엄청난 파괴를 자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2021년에는 ‘단결 인티파다’가 일어나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단결시켰다. 팔레스타인인들을 굴복시키려던 모든 전략은 이렇듯 실패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그런 시도들은 결국 2023년 10월 7일 파산했다. 10월 7일은 75년에 걸친 폭력과 인종청소의 직접적 결과였다.

매번 저항이 분출할 때마다 (그리고 매번 이스라엘이 이를 굴복시키는 데 실패할 때마다) 식민 정착자 사회의 사람들은 더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이데올로기로 기울었다. 오늘날 이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군의 차량을 탈취하고 기뻐하는 가자 주민들

라엘 사회의 가장 우파적인 부분은 제 2차 인티파다 이후에 성년이 된 이스라엘 청년들이다.

노동당 시온주의는 이스라엘 건국 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정부, 국가, 군대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퇴물이 됐다.

게다가 새 정착자 유입 물결이 일 때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저마다의 입지를 두고 경쟁이 벌어졌다.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특권이나 특혜를 얻어 내기 위한 정당들이 여럿 부상했다. 이런 분열은 시온주의 프로젝트 자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더 첨예해졌다.

극우 시온주의 세력은 PA를 용인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땅 전체를 이스라엘로 병합하기를 바란다. 이들은 지금 서안 지구에서 군대와 정착자들이 퍼붓는 맹공을 추동하는 세력이다.

이 종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우익은 또한 이스라엘 내 북아프리카·중동계 유대인(미즈라힘)에게서도 지지받고 있다. 1950년대에 이스라엘로 건너온 이들은 유럽계 시온주의자들이 주름잡는 사회에서 모멸과 차별을 겪어 왔다.

시온주의 권력층과 이스라엘의 군수뇌부, 정보기관들은 우익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고, '점령'이라는 허울을 버리고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병합해 인종분리 체제를 공식화한 국가를 수립할 경우 중동에서 일어날 파장을 우려한다.

이처럼 서로 경쟁하는 이스라엘 내 세력들은 '종전 이후' 가자지구 계획을 놓고서도 분열해 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양쪽 진영 모두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하마스는 궤멸되지 않았다. 이집트와 아랍 지배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자국으로 "이전"시키는 구상에 반대한다. 그랬다가는 자신들의 정권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스라엘 군과 정보기관 수뇌부는 가자지구를 영구히 점령해 다시 정착촌을 짓는 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원한다 한들, 인종 학살을 수십만 명 규모로 확대하면 중동의 반란과 세계적인 대중 시위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굴복시키려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1987년 1차 인티파다 당시 팔레스타인인들의 행진

이런 교착 상태가 시온주의 국가 내에서 첨예한 분열을 부채질하고, 인질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격화시킨 것이다. 물론, 이 시위들은 어떤 의미에서 반전 시위가 아니고 시위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죽음에 관심이 없다. 더욱이 네타냐후와 그가 속한 리쿠드당은 지난 6월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살해한 후 지지율을 회복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네타냐후는 다시금 주요 야당 인사들의 지지율을 앞질렀다. 네타냐후는 휴전하라는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났고, 서로 다투던 시온주의 진영들을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결집시켰다.

위기 해결 능력 부재

그러나 위기 해결 능력의 부재는 중동의 제국주의 질서와 아랍 정권들에 부정적 결과를 안길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식민 정착자 사회의 독특한 국가 구조 덕분에 제국주의 질서를 지탱하는 데서 필수적인 기둥 역할을 맡게 됐다. 다른 아랍 정권들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른바 “군사력의 질적 우위”(QME)를 지켜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법에 명시하기까지 했다. QME란 “이스라엘의 피해나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어느 개별 국가나 국가 연합, 비국가 단체가 덤벼 와도 반격해서 무찌를 능력”을 일컫는다.

이스라엘은 우위를 점한 가운데 주요 아랍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구축

해 왔다. 1973년 전쟁 이후 이집트와의 동맹 체결을 시작으로, 이후 요르단, 더 근래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잇따라 동맹을 맺었다.

2023년 10월, 미국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 체결이 임박했던 것이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그 후의 일들은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이제 지난 수십 년보다 이스라엘에 더 의지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행동에 행사하는 입김이 예전만 못하다. 미국의 지배력은 다른 제국주의 경쟁국들을 견제하고 중동 내 아랍 국가들을 통제하는 데서 과거보다 약해졌다. 미국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재앙적 실패를 겪으면서 커져 버린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

이나와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이 힘에 부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상호 작용하는 다중 위기의 근저에서, 중동에서 반란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국주의 질서와 시온주의 정착자 프로젝트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온주의 정착자 국가가 내부로부터 저절로 붕괴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방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과 인종 학살적 폭력, 테러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중동의 대중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 또는 아랍 지배자들은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중동의 혁명과 제국주의 야수 심장부에서의 대중 반란만이 위기를 끝낼 수 있다.

출처 Rob Ferguson, 'Why Zionist settler colonialism is in crisis' (2024. 10. 12) / 번역 김중환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부산/울산

이스라엘, 레바논 &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의 중동 확산과 저항

일시 10월 19일(토) 오후 3시

장소 부산 하이텐 스타디움 3층 a-sm 강의실 (서면역 2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이원웅 (노동자 연대) 기자,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편저자

참가비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부산/울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서울

이슬람 혐오 - 오늘날 인종차별의 주요 형태

일시 10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등을 쓰고, 《차별과 천대에 맞선 투쟁의 전략과 전술》 등을 편집했다.

참가비 5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레바논의 저항 역사는 시온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의 역사다. 이러한 역사를 알고 나면 현재 저항 세력이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이고 해방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잘 보인다.

레바논은 1970년대 내내 내전에 휘말려 있었고, 이스라엘과의 충돌도 지속됐다.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을 무자비하게 침공했다. 그해 6월에서 8월 사이에만 레바논인과 팔레스타인인 약 1만 4000명이 죽었다.

1982년 9월에는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기독교도 군대인 팔랑헤가 사브라와 샤틀라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학살을 자행해 팔레스타인 난민 약 3500명을 살해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당시 레바논에 있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패퇴시켰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점령하고 수도 베이루트를 포위해 전기와 식량, 물 공급을 차단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기록한 타비사 페트란에 따르면, “전사와 적극적 지지자들, 일반 시민 사이에 놀라운 연대의식이 자라나 포위 기간 내내 사기가 높게 유지됐다.”

헤즈볼라의 등장

시아파 거주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자행한 파괴와 이스라엘에 맞서면서 형성된 강력한 연대는 헤즈볼라(신의 당이라는 뜻)가 탄생하는 토양이 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폐허 속에서 탄생했다. 시아파 무슬림 조직인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의 가난한 시아파 거주 지역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대중 조직으로 발전했다.

헤즈볼라는 다른 아랍 국가의 저항 세력과 달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시아파 거주 지역에서 기반을 닦았지만, 그보다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1920년대에 프랑스



식민 지배자들이 레바논에 구축한 정치 체제는 레바논 국가와 사회 구조 내에 종파 간 분열을 고착화시켰다.

이후 레바논 지배계급은 종파 간 분열을 이용해 민중을 분열 통치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러한 종파 정치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레바논 사회주의자 바셈 치트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 세력 역할을 수행하면서 변화했다”고 지적한다. “헤즈볼라 운동은 보건·복지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열고, 협소한 이슬람주의 정치를 넘어 범민족적 운동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점

령한 18년 동안 두 차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1993년 7월에는 레바논 남부를 황폐화했고, 1996년 4월에는 레바논 민간인 154명을 살해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점령은 저항 세력을 뿌리 뽑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를 더욱 결집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1992년 헤즈볼라는 레바논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헤즈볼라는 도전한 12개 의석을 모두 차지했다. 이는 헤즈볼라가 광범하게 지지받는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가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조짐이기도 했다.

2000년 이스라엘의 철군에 환호하는 헤즈볼라 당원들과 지지자들



시온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에 맞선

레바논 저항의 역사

아서 타우넨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침공에 맞선 투쟁 속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쟁 기구를 물리치려면 다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2000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자 헤즈볼라는 민족의 구원자로 칭송받았다. 2006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다시 침공했고, 그해 7월 ‘다히야 독트린’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군사 교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레바논인을 죽이고 장애를 입히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약 1300명을 살해했고, 100만 명에 달하는 레바논인이 피란해야 했다.

2006년의 승리

1982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잔혹한 폭격은 오히려 더 큰 저항을 촉발했다. 이번에는 헤즈볼라가 저항을 주도했다. [PLO가 패배했던] 1982년과는 달리,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레바논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레바논 사회주의자 시몬 아사프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스라엘의 ‘다히야 독트린’은 악랄하고 잔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레바논인들은 겁에 질리지 않았고, 자조를 위한 전례 없는 대중 운동이 일어났다.”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이스라엘에 억압당한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연대의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이는 종교와 종파의 차이를 넘어섰다.

단결된 저항이 가능함은 당시 신생 단체인 ‘사미둔’이 보여 줬다. 사미둔은 소규모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선봉에 선 구호 단체였다. 아사프는 사미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사미둔은 레바논의 오랜 위기와 전쟁의 역사에 낯설처럼 얽혀 있는 자기 조직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미둔은 철저히 정치적인 프로젝트였고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거창한 구호의 남발을 일절 거부했다. 사미둔은 모든 아랍 정권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인식했고, 민주적 원칙에 따라 조직을 구성했다. 사미둔은 종파 간 분열에 대항하며 헤즈볼라와 레바논 공산당 사이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6년 8월 전쟁이 끝나자 사미둔

도 함께 막을 내렸고, 혁명적 조직 건설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전쟁 후 헤즈볼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미둔의 저항 방식을 본받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종파 간 분열 체제를 받아들이고 국가와 타협할 수도 있었다. 헤즈볼라는 후자를 택했다.

2007년 헤즈볼라는 파리 III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이 파괴한 레바논에 재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다른 아랍 정권들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헤즈볼라는 주로 이란과 카타르에게서 사회 복지 사업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무기 공급도 이란에 크게 의존했다. 헤즈볼라의 이해관계는 점점 레바논 민중과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이 아니라 다른 아랍 정권들과 부합하게 됐다.

헤즈볼라의 모순

아사프는 이렇게 설명했다. “헤즈볼라의 정부 참여와 정치적 후퇴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룰 능력을 제약했다. 그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종파 체제 내 정치인들과 대결할 잠재력도 줄어들었다.” 헤즈볼라가 더욱 관료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시아파 무슬림 기업가 계급이 등장했다. 이들은 재건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되팔아서 이득을 봤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시아파 거주 지역의 사회 복지에 자금을 댔다. 이는 가난한 시아파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했지만, 동시에 종파 간 긴장을 키우는 결과도 낳았다. 헤즈볼라는 더 이상 대중 저항에 전념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11년 3월 시리아 혁명이 시작됐다. 그 혁명의 목표는 잔혹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시리아 혁명을 “외세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헤즈볼라는 전투원 수천 명을 시리아



사진 출처: Raima gamal

레바논의 극심한 종파 간 분열을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 준 2019년 10월 아래로부터의 대중 항쟁

로 보내 혁명을 분쇄하는 데 동참했다.

2014~2015년에는 레바논 노동자들이 파업에 연이어 나섰다. 레바논 전력 회사의 외주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고, 곧이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실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졌다.

2019년에는 레바논의 ‘10월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헤즈볼라는 이 항쟁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2018년 레바논의 실업률은 46퍼센트에 달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사라졌다.

2020년 8월에는 베이루트의 연료 저장 시설에서 관리 소홀로 폭발이 일어나 180명이 사망해 시위가 더욱 격화됐다.

그 항쟁은 레바논의 지배 체제에 도전하는 진정한 대중 운동이었다. 운동의 구호인 “저들 모두”는 종교 소속과 관계없이 지배층 일체를 겨냥했다.

헤즈볼라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공격해 시위 텐트를 불태우고 차량을 파손했다.

그 거리 항쟁은 실패했지만, 혁명적 사회주의자 앤 알렉산더가 지적하듯이 “이례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연대를 표현할 기회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성별과 세대, 서로 다른 종파 사이에 놓인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일부 무너뜨렸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알렉산더가 지적하듯이 그 항쟁은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인, 시리아인, 그 밖의 ‘외국인’으로 이뤄진 천대받는 거대한 공동체들의 요구를, 변화를 쟁취하려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일부로 만들지 못했

다.” 그 항쟁은 몇몇 개혁주의적 국회의원의 당선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 결과 그 항쟁은 서로 다른 집단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천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종파 간 분열로 빠져들고 말았다.

교훈

레바논 저항의 역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계급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빈민·노동자 대중에게 지지받는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계급적 기반에서 멀어졌다. 그 대신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지배계급과 지역 강국인 이란과 결탁했다.

레바논 국민국가에 대한 헤즈볼라의 헌신은 레바논 국가의 보전과 종파 간 분열 체제를 방어하는 것을 수반한다. 국민국가와 국가 기구는 자본주의 지배 체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2006년 사미둔은 노동계급의 독립적 저항이 어떻게 해방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여 줬다.

레바논에서 일어난 ‘10월 혁명’의 실패는 민족주의와 국가를 넘어서는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 준다. 노동계급의 저항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항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제국주의와 대결하는 데서 핵심적이다.

출처 Arthur Townend, ‘Lebanon’s history of resistance’ (2024. 10. 8) / 번역 김동욱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8

레바논 해방의 전망은 무엇인가

앤 알렉산더

중동 문제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다리티》 편집자

이스라엘은 수년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살인 표적을 정한다. 표적 선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SNS 게시물, 수상해 보이는 교신으로부터 수집되거나, “용의자”의 주소에 근접한 휴대폰 신호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각 “표적”의 주변에는 죽음의 지대가 형성된다. 표적 살해 과정에 수반되는, 이스라엘과 서방의 이스라엘 후원국들이 보기에 ‘용인 가능한’ 살상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다.

가자지구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동하던 이 살인 공장은 이제 레바논 사람들을 상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폭기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2000파운드가량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떨어뜨려 주거용 건물 4채를 완파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유엔 총회에서 이번 개입이 중동의 세력 균형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1967년 6일 전쟁 이후처럼 서방 언론이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추켜세울길 바라는 듯하다.

문제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물리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물리치는 것은 훨씬 어려운 과제라는 점이다. 영국 보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9월 28일자 헤드라인은 “전쟁의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라”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꺾을 수 없고 그저 약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세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스라엘군은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저항 운동을 제압하려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공중 폭격 작전을 펴는데 그런 작전이 갖는 피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테러 군대”로 지정하는 군사 교리를 채택했다.

이러한 접근법의 조정을 보면 이스라엘 관리들이 대량 학살에 관해 제시하는 변명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적 전투원”이다. 군복 착용이나 총기 소지 여부, 구호 활동을 조직한다거나 민간 방위대 지도자인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레바논에서 의도적으로 구급차를 공격한 이스라엘

사진 출처 Euro-Med Monitor

10월 3일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에 당한 이슬람보건기구 병원의 의료진 9명이 그런 논리의 가장 최근 희생자들이다. 유럽연합의 최고 외교관인 조셉 보렐조차도 이러한 살인을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살해 정책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맞서는 운동들과 그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을 모두 표적으로 삼는 전술을 실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AI로 무장한 군사 시스템은 고층 건물, 대학, 기타 민간 기반 시설들을 “주요 표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반 시설의 파괴를 통해 민간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투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식민 지배를 위한 전쟁에서 사용된 아주 오래된 “저

항 진압” 전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식민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불타 버린 집과 논밭, 학살당한 시신들이 남아 있었다.

문제는 통상적인 군사력의 우위가 자신의 가족, 집, 땅을 지키려는 투사들에 맞선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랜 점령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이 교훈을 배우고 또 잊기를 반복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는 모두 제국주의적 야망의 무덤이 됐다. 그 과정에서 그곳의 민중들이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은 2023년 10월 7일 공격을 내다 보지 못한 재앙적인 정보 실패에 이어 하마스의 군사적·정치적 역량을 파괴하는 데 실패하는 두 번의 굴욕을 겪었다. 이스라엘의 전쟁 기획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82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한 군사 공세의 일환으로 레바논을 침공했다. 그 시작은 화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2년 침공은 18년 뒤 굴욕적인 철군으로 귀결됐다.

레바논을 다시 침공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내 갈등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다. 이스라엘 정치는 원래 분열이 극심하기로 악명이 높지만, 오늘날의 위기는 그 이전보다도 한 차원 더 심각하다. 2023년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개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서는 엘리트 연대 출신 조종사 등 군 고위 인사들이 눈에 띄는 역할을 했다.

종교적 시온주의 우파는 현재 선거 제도를 통해 정치적 권력의 키를 쥐고 있다. 군대의 위계질서 내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많은 일반 사병들이 10월 7일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상급 지휘관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가자지구에서 약탈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서안지구 제닌의 모스크에 설치된 확성기로 히브리어 기도를 외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저항은 이스라엘 내의 이러한 모순을 심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겉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장 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때때로 일정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에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의 뗏(구정) 공세가 미군의 베트남 전쟁 패배에 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다. 뗏 공세는 비록 NLF의 군사적 참패로 끝났지만 “베트남에서 미국의 승리가 임박해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이를 계기로 전쟁에 대한 미국 대중의 지지가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NLF가 뗏 공세로 달성한 진정한 성과는 그저 전쟁에 지친 대중에게 충격을 준 영웅적인 실패담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에서 누락된 고리는,

군사력의 우위만으로는 자신의 가족, 집, 땅을 지키려는 투사들을 꺾기가 쉽지 않다



베트남에서는 평범한 민중들이 미국과 미국의 대리인 정권에 맞서 싸웠다

민족 해방 투쟁과 사회적 해방 투쟁 사이의 관계에 있다. 스탈린주의 정치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도한 NLF는 자신의 투쟁을 확고하게 제한해 민족 혁명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미국의 대리자 정권에 맞선 그 전쟁의 사회적 차원이 농민 투사들을 계속 저항에 나서게 만들었다. NLF 투사들이 투지를 잃지 않았던 것은 민족 독립이라는 전망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또한 농촌을 가난하게 만들어 이득을 보는 지주들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염원했다.

이스라엘 점령에 맞선 투쟁에서도 사회적 차원이, 과거 레바논 침략에 맞

서 대중을 가장 성공적으로 동원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침략을 물리친 2006년 전쟁 때는 자기 조직화한 민간 방위 운동이 대규모로 부상했다.

이 운동은 좌파가 독자적 주도력을 발휘해서 시작된 것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끈질기고, 수완 좋고, 창의성 넘치는 뿌리 깊은 전통을 기반으로 건설되고 확장됐다. 이 운동의 실천적인 초점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남부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동의 정치적 목표는 민간인 사회 조직을 의도적으로 군사적 표적으로 삼는 이스라엘군의 잔혹한 “다히야 독트린”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었다.

이 운동의 주요 조직자들은 자신들이 혁명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민족 해방 투쟁과 사회적 해방 투쟁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결합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레바논 사회 전반에 깊은 뿌리를 둔 더 광범위한 저항 운동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저항을 뜻하는 아랍어 ‘알 무과와마’는 대다수 서구의 평론가들이 거의 포착하지 못하는 잠재력을 함축하고 있다. 수단의 젊은 활동가들이 오마르 알바시르 독재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기층 조직을 “저항위원회”라고 부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저항위원회의 활동이 기존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에서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것으로까지 매끄럽게 전환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저항위원회의 자원 활동가들은 빵집의 밀가루 공급을 조율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소독제를 배포하고, 국가를 민주적으로 개혁할 계획을 토론했다.

2023년 4월 수단의 두 주요 무장 조직인 수단군과 신속지원군의 각 지도부는 서로 전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항위원회 활동가들은 ‘긴급상황실’로 자기 조직화했다. 긴급상황실은 난민들의 피난처를 조직하고 자원 활동가들을 모집해 절박한 처지

아랍의 저항 세력이
승리하려면,
이스라엘 국가를 무너뜨리고
시온주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의 민간인들에게 식량, 식수, 의료품을 제공했다.

수단의 긴급상황실과 2006년 레바논에서의 경험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점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수단의 긴급상황실은 일반적으로, 수단 국가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설립한 반면, 레바논에서는 비슷한 활동이 이스라엘에 맞선 무장 저항 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위해 조직됐다.

결정적으로 두 운동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자기 조직화한 사회적 동원이 노동자·빈민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운동들은 군사력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사회적 힘에 뿌리를 둔 저항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저항 세력이 승리할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 국가를 무너뜨리고 시온주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해체할 힘이 있는 사회 세력이 다시 각성해야만 한다.

조직 노동자들의 개입이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은 현재 이집트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 보급망이 국제적으로 걸쳐 있음을 고려하면 필자가 있는 영국 내 노동자들의 행동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사회 혁명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의 전쟁 기구를 물리칠 지름길은 아닐 지라도, 해방의 더 탄탄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항을 단순히 제도나 조직에 관한 것이 아닌 정치적 실천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저항은 게릴라 군사 작전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저항은, 노동자와 빈민이 아래로부터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초로 삼는 혁명적 전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출처 Anne Alexander, ‘Lebanon: What can beat Israel’s assassination factory?’ (2024. 10. 10)
번역 최병현



2006년 레바논을 침공했다가 패퇴해서 철수하는 이스라엘군

노동자 연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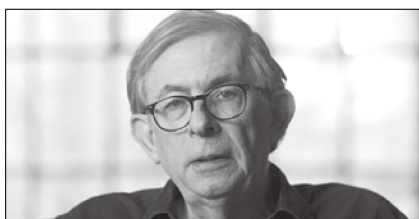
영국 노동당 정부의 재앙적인 첫 100일과
극우화하며 재기 노리는 보수당

거의 모든 영국인들이 보수당 의원단의 당대표 선출 과정을 보며 큰 웃음을 터뜨렸다. 전직 내무장관인 제임스 클레벌리는 당대회에서 연설을 잘한 덕분인지 다른 후보들을 앞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의원단의 최종 투표에서 그는 표를 잃고 3위로 주저앉아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제 보수당 당원 투표에서 평당원들은 케미 베이드녹과 로버트 젠릭이라는 두 극우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난무한다. 클레벌리가 자신의 우위를 너무 믿은 것이 독이 됐을까, 아니면 그의 경쟁자들이 더 영리했던 것일까? [우파] 주간지 <스펙테이터>는 한 “보수당 전략가”의 말을 인용했다. “보수당 의원들의 기만과 공작은 아무리 많은 브리핑과 전략, 홍보전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다.”

어찌 됐든,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논평가들은 클레벌리의 낙마에 기뻐했는데 그가 당대표가 됐으면 “리시 수낙 2기”가 됐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충분히 우익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 논평가들이 보기에 보수당의 과제는 “보수당 대가족을 다시 단합시키는 것.” 다시 말해 7월 총선에서 보수당을 버리고 영국개혁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베이드녹과 젠릭은 보수당 내 극우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정치의 서로 다른 두 버전을 대표한다. 베이드녹은 급조된 ‘문화 전쟁’ 투사이고, 젠릭은 이주민에 적대적인 나이절 퍼라지의 거친 연사를 흉내내서 정치적 입지를 부풀린 별 볼일 없는 자다. 둘 다 최근 보수당 대표들의 수준에 비해 보더라도 3류 정치인들이다.

이런 보수당을 보며 노동당은 흡족해했다. <가디언>의 피파 크레러는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다. “한 노동당 의원이 내게 문자를 보내어, 보수당 지도부 선출 결과를 선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는 최근 노동당 정부의 총리 키어 스타머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하는 농담이다.

이 농담은 꽤 재미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수당이 끝장났다고 여기



영국 보수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 보수당은 극우화하며 영국개혁당에 뺏긴 표를 되찾으려 한다

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보수당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그 자리에 오래 남아 있지 못할 수도 있다. 2000년대 초의 이언 던컨 스미스나 마이클 하워드도 그랬듯 말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은 지난 20년 동안 정당 체제가 갈수록 파편화돼 온 과정을 확인시켜 줬다. 보수당 득표는 전보다 10퍼센트포인트 하락해 23.7퍼센트였고 노동당도 33.7퍼센트에 불과했다. 승자 독식 선거 제도의 왜곡 효과 덕분에 노동당은 전체 의석의 63.2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었다.

파편화된 정당 체제

여러 정당이 상당한 표를 얻었는데 극우인 영국개혁당이 14.3퍼센트, 중도우파인 자유민주당이 12.2퍼센트, 그보다 좀 더 왼쪽인 녹색당이 6.7퍼센트를 득표했다. 한편, 제러미 코빈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다섯 석을 얻었다. 이 무소속 후보들은 노동당이 스타머하에서 우경화하면서 생긴 불만에서 득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노동당이 이번에 허약한 대승을 거뒀지만, 그 전인 2019년 12월 총선 때는 1935년 이래 최소 의석이라는 참패를 당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 7월 선거를 앞두고 분석가 제임스 카나가수리암은 유권자들이 거대 양당에 갈수록 연연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모래성 정치학’에 도달했다. 즉,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인 정치 연합체들이 빠르게 형성되지만 흐름이 바뀌면 마치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정치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보수당이 지난 7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당대회에서 비교적 괜찮은 사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언론인들은 전한다. 그도 그럴 것이, 스타머가 거창하게 변화를 약속한 집권 첫 100일이 꽤나 재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머 자신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추락했는데, 이는 스타머 정부가 연금수급자에 대한 겨울 연료비 지원에 자격심사를 도입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수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스타머와 다른 고위급 노동당 정치인들이 알려 경제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어 그들의 탐욕이 드러난 결과다.

보수당은 이를 보며 자신들이 노동당을 제칠 수도 있다고 본다. 과거 자신들이보리스 존슨과 리즈 트러스의 재앙적인 총리 재임기 동안 노동당에 따라잡혔듯이 말이다. 보수당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다음 총선에서 — 역자] 베이드녹이나 젠릭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필연은 아니다. 스타머와 그의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에게는 여전히 모종의 전략이 남아 있다. 그들은 영국 경제의 경쟁력을 재건하려는 비교적 온건한 투자 정책들을 금융시장과 대기업들이 지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 정책들을 ‘저가형 바이드노믹스’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노동당에 아직 남아 있는 노동계급 기반을 달래기 위해 몇 가지 사소한 선물도 던져 줬다. 예컨대, 공공부문 임금인상과 고용권리법안이 그렇다.

그러나 그런 전략이 실패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극우의 보수당 장악은 노동당이 아닌 대안이 매우 고약할 것임을 뜻한다.

출처 Alex Callinicos, ‘Don’t write off Tories at next general election’ (2024. 10. 14) / 번역 김중환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 주류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63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KT 6000여 명 대량 해고 계획 유출

이원준 KT 노동자

KT 사측이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 들었다.

10월 10일 KT의 '현장 인력구조 혁신 방안'이라는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 문서는 충격적이게도 현장 인력 5750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담고 있다. KT 사업의 주축인 통신 케이블 관리를 전면 외주화하고 본사에서 해당 직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로 전출되는 10년차 이상 직원들의 임금은 기존보다 무려 30~50퍼센트나 삭감된다!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지만, 임금 30퍼센트 이상 삭감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임금 삭감으로 국민연금 납부액도 줄어 연금 수령액도 삭감되면 노후 생활도 힘들어진다.

사내 복지 혜택의 대폭 삭감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KT 자회사들은 낮은 임금과 복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악명 높다.

사측은 업무가 폐지되는 직원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명예 퇴직'을 강요할 듯하다. 또한 회사의 구조조정안을 거부하고 KT에 잔류하는 직원들을 '공백 상권'으로 발령한다고 한다. 격·오지 발령을 예고한 것인데, 이는 기술직 현장 요원에게 생소한 영업 업무를 맡기는 것처럼 비열한 퇴사 압박 수단의 일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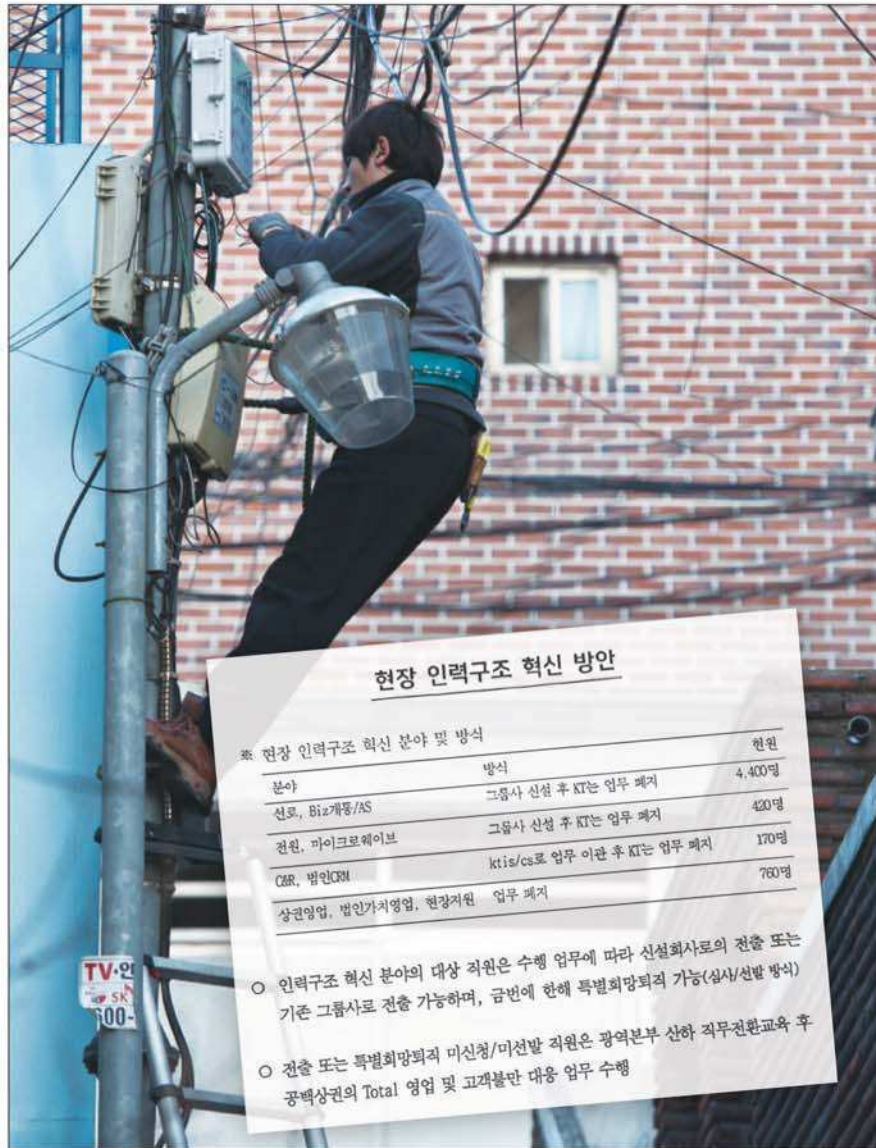
2014년에 8300여 명을 구조조정할 때도 이런 괴롭힘이 극심했다. 사무직 여직원을 비연고지의 현장 요원으로 발령해, 전봇대를 오르게 한 것과 같은 악랄한 사례도 있었다.

KT의 구조조정 계획안이 보도되자, KT 경영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KT는 이 문건대로 10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접한 노동자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4400여 명이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통신선로 유지·보수 노동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자회사로 보내려고 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노동자들까지



수년간 주주 배당을 늘려 오더니 이제 KT는 노동자 희생시켜 AI 투자금을 마련하려 한다

자회사 전출 대상으로 거론되자, 노동자들은 '취업 사기가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오랜 세월 임금 억제와 실적 경쟁 그리고 엄청난 노동강도에 짓눌리며 일해 온 노동자들이 왜 쫓겨나야 하는가?

KT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조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AI 시장에 뛰어들기

KT가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AI(인공지능) 전환을 돕는 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KT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통신 분야 인력을 대폭 줄이고 싶어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의 일환이기도 하다.

9월 13일, 윤석열은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AI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한국 기업들이 AI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문했다.

당시 KT 사장 김영섭은 "AI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적극 호응했다. 김영섭은 사장 선임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던 이관섭과의 인연이 그 뒷배경으로 거론된 바 있다. 김영섭은 사장 취임 이후 검찰 출신자 등 윤석열의 측근 인사들을 KT에 적극 영입하며 정권과 코드를 맞춰 왔다.

최근 KT는 MS(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동맹을 체결하고 향후 AI, 클라우드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무려 2조 4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KT는 이런 사업 재편에 발맞춰 AI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즉, KT가 돈이 없어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사업의 수익성 하락이나, 사측의 사업 재편에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업 재편과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KT는 이미 수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2009년에는 5992명, 2014년에는 8304명의 노동자들이 대상이 됐다.

그 덕에 KT는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고, 그중 일부는 국내외 대주주들에게 대거 배당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만 희생된 것이 아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시설 투자를 줄인 결과 잇따른 통신 대란이 벌어져, 통신 공공성도 약화됐다. 그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입어야 했다. 그중 유명한 사례가 2018년 서울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다.(본지 기사 'KT 노동자가 말한다, '통신 대란'의 진정한 이유 — 민영화와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재난'을 참조하시오.)

KT는 노동자들을 제물 삼아 AI라는 거대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AI 분야에 투자가 몰리면서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AI 사업이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 KT는 또다시 그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이 된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함께 힘을 모아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구조조정을 막아 내려면, 기층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단결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1노조 집행부는 투쟁을 즉각, 제대로 조직해야 한다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이 폭로되자, 제1노조인 KT노조 집행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10월 11일자 성명서에서 "회사가 끝까지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편안을 고집한다면 특단의 대책이라도 강구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특단의 대책"은 즉각적인 조합원 대중 행동이어야 할 것이다. 파업 등 기층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조합 간부들만 참가하는 집회 등 생색내기용 제스처로 구조조정을 막아 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2014년 밀실에서 구조조정을 합의했던 것과 같은 배신적 타협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2노조인 공공운수노조 KT지부(KT새노조)와 KT민주동지회(KT노조 내 민주파 조합원 모임)는 지금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조합원들에게 호소하며, 제1노조 집행부가 투쟁을 조직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이스라엘 자제 촉구는 왜 약발이 먹히지 않는가

김인식

“X자식 비비 네타냐후, 개는 정말 나쁜 놈이야!”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이 10월 15일 내놓는 신간 <전쟁>에 담긴 내용이다. 밥 우드워드는 그 책에서 바이든이 네타냐후의 전쟁 방식에 큰 불만을 가지면서도 끌려다녔다고 썼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가?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무능 탓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이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미국 국내 편집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는 ‘뛰는 바이든 위에 나는 네타냐후’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10월 5일 자).

“바이든만큼 중동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던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 침공과 이란과의 전면전이라는 불안 요인 때문에 바이든만큼 중동 정세로 기억에 남게 될 대통령도 없을 듯하다.”

1년 남짓 전에만 해도 중동 상황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화”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다른 전선들에 대응할 여지가 생기는 듯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푸틴의 러시아를 약화시키려 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전선인 신흥 강대국 중국과의 결전 대비에 집중할 수 있을 듯했다.

2020년 9월 미국 백악관에서 당시 대통령 트럼프는 아브라함(이브라힘) 협정 체결식을 주관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바레인이 국교를 수립하기로 한 외교적 합의다.

10월에는 수단도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에서 패배한 아랍 국가들이 아랍연맹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곳이 바로 수단의 수도 하르툼이었다.

12월에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수교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10월 7일 직전에는 ‘아랍권의 큰 형님’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은 그해 9월 20일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협상에 대해]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다. 처음으로 진지한 것 같다.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역사적 거래다.”

부패하고 반동적인 아랍 정권들이 미국의 재정·안보 지원 약속에 팔레스타인인들을 배신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배신적인 합의는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어그러졌다.

물론 그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가와 정착자들의 폭력과 테러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했다. 2021년 5월 18일 총파업이 보여 주듯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저항했다.

그러나 10월 7일 공격에 굴욕감을 느낀 이스라엘이 그 보복으로 가자지구를 산산이 부수면서 “관계 정상화” 프로젝트는 파탄 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결국 서로가 필요하다. 불협화음이 있어도.

사진출처: 로이터/이코노미스트

위기에 빠져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애당초, 미국이 중동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빈약했다. 중동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다른 경쟁 강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게 중동 석유의 지배가 여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중동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의 무역로를 연결하는 요충지다.

그래서 미국은 20년 전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그러나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이 전쟁에서 (수많은 중동인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결국 패배했다. 이라크는 현재 이란의 동맹국이 됐다. 3년 전 미국 군대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굴욕적으로 철수했다.

다른 열강이 미국의 중동 지배력 상대적 약화가 낳은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예컨대,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7월에는 중국의 중재로 하마스파타 등 팔레스타인 14개 정파가 베이징에 모여 임시 민족화해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없이는 이토록 중요한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

이스라엘은 보통 국가가 아니다. 너무 특수해서 예외적인 국가다. 이스라엘은 1948년 나크바(대재앙)를 통해 팔레스타인인 약 100만 명을 고향에서 쫓아낸 뒤 세운 정착촌을 중심으로 건국됐다. 이스

라엘의 구실은 처음부터 서방 제국주의의 “긴 리치”가 되는 것이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국가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7일 공격 직후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당방위권”을 열렬하게 옹호했다. 미국은 가자지구를 박살 내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학살하는 이스라엘에 폭탄과 군수품을 신속하게 제공했다. 미국 항공모함과 해병대는 이스라엘의 방패가 됐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지난 8월까지 가자 전쟁에 투입된 직접 비용이 1000억 셰켈(약 35조 266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은 최소 179억 달러(약 24조 1000억 원)다(미국 브라운대학교 ‘전쟁 비용 프로젝트’).

미국의 군사 원조 중 40억 달러는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등을 요격하는 ‘다비드 슬링’(다윗의 돌팔매)을 보충하는 데 사용됐다.

미국의 문제는 자신의 경비견이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분쇄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10월 5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에서 다시 군사작전을 확대했다. 자발리야는 이스라엘이 이미 여러 차례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했다”고 주장했던 곳이다.

가자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네타냐후 정부는 레바논을 침공했고 이란으로 전쟁 확대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전력을 다해 지원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은 지난 6월 “평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측이 그 안을 제안했다고 둘러대기까지 했다. 그 안에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휴전,”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간 맞교환, 수년에 걸친 가자지구 재건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그 “평화 계획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했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학살을 지속했다.

레바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자제”와 “휴전”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라는 압력이었다.

가자지구 인종 학살은 이스라엘 국가를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가자지구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는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인도주의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 자국의 장기적 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시작된 인종청소를 완료하기 위해 인종 학살이 필요하다.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참여연대의 훌륭한 폭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기대 걸기는 연목구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실행위원인 임재성 변호사가 10월 10일 <한겨레>에 팔레스타인 연대에 관한 칼럼을 실었다. 제목은 “이스라엘 무기수출 중단’ ... 야당이 해야 한다”이다. 이 글은 참여연대 사이트에도 게재됐다.

임재성 씨는 글의 목적을 첫 문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 야당들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정책)을 최선두에 놓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

참여연대는 한국 기업들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관한 유용한 폭로를 해서 운동에 기여해 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700억 원이 넘는 무기류를 이스라엘로 수출했다. 이번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이후 5개월 동안에도 최소 18억 원어치의 무기류를 수출했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호 속에 이뤄진 일이다.

임재성 씨는 이렇게 글의 결론을 냈다. “한미 동맹과 케이(K)방산을 주술처럼 외치는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것은 없다. 원내 1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3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 결단해 달라.”

민주당과 제국주의

팔레스타인에서 광란의 인종 학살이 1년도 넘게 지속되는 동안 이재명과 조국은 무기 수출 중단 요구는커녕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말 몇 마디조차 기피해 왔다. 왜 그런 것일까?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한미 동맹과 케이(K)방산을 외치는” 데서 우파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도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 질서에 편승하고 줄타기해서 한국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점에선 한국 지배계급을 충실히 대변한다. 국힘(과 그 전신들)과 구체적인 방식만 다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긴 했지만(중국 문제는 우파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실천에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 적이 없었다. 민주당 정부들은 한미동맹이 역사적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기둥이었다는 인식을 언제나 우파들과 공유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한 역대 한국 정부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중동 정책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일부 중단을 성취한 캐나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과 사실상 발을 맞추고, 유연성을 발휘할 때도 미국의 중동 전략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미국이 중동의 석유를 통제하고 경쟁 열강에게 미국의 패권을 천명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군대를 파병했다. 이라크 파병 규모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이스라엘이 2006년 레바논을 공격했다가 패퇴한 뒤,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2007년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레바논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동맹부대를 파병했다.

방산과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에서도 민주당 정부들은 예외가 아니다.

1995년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합의가 처음 체결된 이후 2003년이 되자 이스라엘이 수출하는 무기의 12퍼센트를 한국이 구입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모두 이 거래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특히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2015년 0.9퍼센트에서 2016~2020년 2.7퍼센트로 무려 세 배로 늘었다.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더욱 크게 증가했다. 유엔 세관데이터(UN comtrade)에 따르면, 2015~2020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2009~2014년보다 22퍼센트 증가했다. 문재인 정

부 4년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2344만 달러(265억 원)로, 박근혜 정부 4년간 수출액인 1019만 달러(116억 원)의 갑절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가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의 절반 이상은 탄약과 미사일 등 발사 무기류였다. 그중 많은 것이 지난 1년간 가자지구에서 사용됐을 수 있다.

대중 행동, 진정한 동력

임재성 변호사나 평화운동 단체들이 민주당의 이런 전력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설득해 국회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에 나서게 하려는 것은 평화 문제에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핵심 동력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 행동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은, 여론을 움직여 민주당을 압박하고 설득해 국회에서 이스라엘 압박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나아가 유엔에서도 그러한 결의안이 통과되게끔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운동 때도 그 운동의 주도적 단체 중 하나인 동시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그 당의 개혁파 의원들을 끌어들이려 애썼다.

그러나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마지막까지 파병에 소신 있게 반대한 의원은 단 한 명(임종인 의원)뿐이었다. 결국

파병을 막지 못했다.

한편, 임재성 씨는 칼럼에서 최근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일부 제한한 프랑스, 캐나다, 영국 사례를 모범으로 든다.

물론 그러한 조치는 성과다. 이스라엘로 가는 전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말이다.(예컨대 영국은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품목 350개 중 단 30여 개만 제한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정부들이 스스로 개과천선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캐나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10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고, 2021~22년은 캐나다 역사상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수출이 가장 많은 해였다.

진정한 동력은 지난해 11월 최대 10만 명 규모에 달할 만큼 컸던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나왔다. 캐나다에서는 지금까지 수십 개 도시에서 만만찮은 아래로부터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특히 영국은 미국과 함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가장 큰 나라다. 최대 규모였을 때 거의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국가에 무기 수출 중단 등의 조치를 압박하려면 최대한 거리 운동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파업이 결합되면 더욱욱 훌륭하지만 말이다.)

참여연대는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팔레스타인인들과연대하는 사람들과 다른 연대체이다)을 정치적으로 주도하는 단체다.(비록 집회 조직 등의 실무는 더 좌파적인 몇몇 다른 단체들이 맡고 있지만 말이다.)

참여연대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반대하고, 다른 단체들이 그런 참여연대와 같이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참여연대가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좌파가 참여연대를 연대체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다면 완전 부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좌파가 참여연대의 그런 입장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공동전선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에 대한 유용한 폭로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설득하기가 아니라, 거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내는 데에 진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신규 유입 반대하면서 기존 이주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

숙소를 이탈해 미등록자가 됐던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이 출입국 당국과 경찰의 추적 단속에 붙잡혀 10월 10일 끝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았던 이들을 도리어 강제 추방 하다니 잔인함이 따로 없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반대해 왔던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9월 26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로 재출범했다.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유입을 반대하다가, 이들이 유입돼 일을 시작하자 그들의 처우 개선을 내세우는 이름으로 변경한 것이다.

연대회의에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노동당 여성위(준) 등이 속해 있다.(전진은 기 후 연대체에서 진보당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신이 왜 자신의 주장과 전혀 모순되는 이런 연대체에 남아 있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

연대회의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10월 2일 <이데일리> 주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범사업 이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서비스 확대 계획을 중단하고 외국인 수급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요컨대 연대회의의 입장은 '이미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조직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싸우지만, 이주노동자 신규 유입은 반대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한국행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에서도 일관될 수 없다.

예컨대 연대회의와 그 소속 단체들은 이탈자 발생이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 고용 업체를 옹계 비판했다. 그러나 이탈자 2명이 붙잡혔을



더 이상은 오지 마라? 노동자들은 이주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며 싸울 때 힘이 커진다

때 추방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그동안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신속하게 규탄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탈자 추방을 반대하면 이들의 한국 유입을 반대한 기존 입장과 모순을 빚기 때문일 것이다. 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일반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방어하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이다.

또한 신규 이주노동자 유입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주민 처우 개선 조치들을 지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취업 시간과 업종 제한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유학생들이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면 지지할 수 있을까? 또는, 한국에서 더 일하기 위해 미등록자 되기를 선택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을까?

특히 난민 유입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난민은 계획되지 않은 이주민 유입인데, 일단 들어오면 그들도 일해서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도 '경제적 목적의 가짜 난

민'을 걸러내야 한다며 난민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난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산업 예비군”

대체로 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은 가사·돌봄 부문에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기 전에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라고 주장해 왔다. 즉, (흔히 암시적으로)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라고 요구해 온 것이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 저하를 유발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미 들어온 이주노동자 차별은 반대하면서도 신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쟁해 정해진 몫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으면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파나 정부가 기존 이주노동자까지 문제 삼는 것에 취약해질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이주노동자는 마르크스가 말한 “산업 예비군”과

같은 구실을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상대적 잉여 노동인구, 즉 자본의 평균적 필요에 넘치는 인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확대하면서, 생산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점 더 적은 노동력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대적 잉여 노동인구”는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어 기존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된다. 산업 예비군(실업자)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자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이 실업자들을 경쟁 상대로 여겨 배척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마치 지금의 이주노동자처럼, 노동 시장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이 기존 노동자들의 경쟁 상대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1830년대 영국의 재단사들은 여성들의 낮은 임금이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내린다고, 여성 고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는 한 세기 이상 지속됐다. 이에 맞서, 여성에게 동등한 임금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모든 노동자에게 득이 된다고 설득하는 것이 당시 좌파적 활동가들의 과제였다.

자본가들은 노동력의 이주를 때로는 허용하고 때로는 제한함으로써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이주 규제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없다. 노동자들은 이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할 때 사용자들에 맞설 힘이 커진다.

고용과 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항하느냐에 따라 가장 크게 좌우된다. 신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하는 태도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해쳐, 기존의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그들을 국제 노동계급의 일원으로 환영하고 단결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준형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0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3): 오늘의 북한

1989/1991년 동구권 붕괴 이후, 1990년대 북한 국가자본주의는 대규모 아사 사태로 치달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대규모 탈북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대중의 불만과 동요가 커졌다.

그때 북한은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였다.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북한을 '악마화'하며 대북 위협을 강화했다. 미국과 북한은 한 차례(1994년) 전쟁 위기와 여러 차례 협상 국면을 반복했다.

안팎의 위기에 대응해 김정일 등 북한 지도층은 군 우선 정책(이른바 "선군정치")을 내세웠다. 대중이 굶주리는 와중에도 북한 관료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야 했다. 선군 정치는 외부의 적(미국)에 맞서 내부 결속을 강조하며 불만을 잠재우는 데에도 필요했다.

북한 관료는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면서도, 기회만 된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시도했다. 그래야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본과 물자를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다고 여겨서였다.

하지만 제국주의적 압박으로 이런 난제들이 모두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채,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계승했다. 3대 권력 세습은 대내외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북한 관료의 선택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대외 무역의 성장에 힘입어 제한적으로 회복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하자원과 의류 제품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급증했다.

경제 위기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소규모 무역상과 사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체 등이 생겨났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적 시장화



제국주의적 압박 속에 북한 관료는 핵/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쏟아야 했다

에 주목하며, 시장화의 혜택을 입은 신흥 사회집단이 북한 사회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런 변화는 일부 서비스업과 소규모 경공업에 국한돼 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중공업 등 경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영 기업들이 지배한다. "돈주"라고 불리는 북한의 신흥 자산가들도 결국 국가기구의 용인과 관료와의 유착에 의존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의 변화(소위 "개혁·개방")는 북한 노동계급에게 진보가 아니다.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 자본주의로 가는 계걸음질일 뿐이다. 노동계급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차별받는 것이다.

1989/1991년 동구권 붕괴의 경험은 북한 노동계급에게 반면교사다. 1989~91년 이후 동유럽/소련 사회는 시장 경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전환은 동유럽과 러시아 노동계급 대중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지 못했다. 지령 경제가 붕괴한 폐허 위에서 노동자들은 계속 희생을 강요받았다.

2018~2019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렸다가 실패한 후, 북한은 러시아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핵무장을 강화해, 적어도 5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국가 중 한쪽의 손을 잡은 것은 북한이 표방하는 '반제'를 무색하게 한다. 또한 북·러 동맹과 핵무기는 북한을 제국

주의적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기는커녕, 제국주의적 경쟁에 더 깊숙이 휘말리게 할 공산이 크다.

부분적으로 회복됐더라도 오늘날 북한 경제는 모순이 심하고 극도로 불균형하다. 가령 북한은 중간 규모의 공업국이지만 여전히 선진적인 생산수단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중공업 성장을 위해 소비재 생산을 지방 공업에 떠넘긴 결과, 소비재 부족과 그 후진성도 만성적이다. 올해 초 김정은도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 연재물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북한 관료의 이해관계는 북한 노동계급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그래서 관료는 강력한 국가 억압으로 노동자들을 원자화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도 착취와 축적의 현실 때문에 계급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이는 훗날 노동자들의 공공연한 반란으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긴밀한 중국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저항이 분출하면 이는 북한 내부에 거의 즉시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 노동계급은 진정한 대안, 즉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추구할 잠재력이 있다. 스탈린주의를 거슬러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북한에서 그런 투쟁이 벌어진다면 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스무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냉전기 반(反)스탈린 투쟁과 1956년 헝가리 혁명에 관해 다룰 것이다.



▶ 16면에서 이어짐

략에 맞서 헤즈볼라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방위사업청은 통상 2주 걸리는 수출 허가 심사를 한 달 넘게 끌면서 허가하지 않고 있다. 레바논 군에 대한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말이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확산하는 시점에서 레바논 군의 방어 무기가 될 포탄의 수출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독일·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 인종 학살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서방 제국주의 지원 노선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폭로한 단체와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무기거래조약과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편, 10월 13일에는 한국군 동명부대가 포함된 레바논 남부 주둔 유엔평화유

지군(UNIFIL)의 기지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스라엘군은 유엔군 주둔 기지와 그 존재가 레바논 침공에 방해가 된다며 철수하라고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오만 방자한 행태에 대한 국제적 항의에는 다국적 유엔군에 포함된 한국도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도 9월 유엔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무기 수출은 중단할 김새가 없다.(당시 표결에서 한국은 기권했다.)

한국이 지금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행태는 친서방적 이중잣대의 위선은 물론이고, 유엔 기구 자체의 실체(쓸모없거나 나쁘거나)도 새삼 드러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학살·침략 전쟁을 돕고, 국제적으로 고립돼 가는 이스라엘의 숨통을 틔워 주는 윤석열 정부의 위선적 외교를 규탄한다. 이스라엘 무기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김문성



미국 항만 노동자들 파업,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난주에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강력한 힘을 보여 줬다.

국제항만노동자연맹(ILA) 소속 노동자 5만여 명은 향후 6년간 시급 24달러 인상을 요구하며 3일간 파업했다. 현재 조합원들은 작업장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승리로 최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시급이 39달러에서 63달러로 오를 것이다.

이번 파업은 ILA가 1977년 이후 최초로 전체 해안에서 벌인 파업이다. 이 파업으로 여러 항만에서 운송이 완전히 마비됐다.

그러나 사측이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다.

항만 노동자들은 사측이 하역용 크레인과, 컨테이너선에서 하역한 상품을 나르는 트럭을 무인화 하는 것에 맞서 행동에 나섰다. 그 조치로 사측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항만·운송 기업주들의 조합인 미국 해양협회(USMX)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ILA는 사측이 화물 자동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저지에서 피켓라인[대체인력 투입 저지 행동]에 참가한 정비 노동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이미 캘리포니아 항만 노동자들은 자동화 때문에 일자



이번 파업은 항만 노동자들이 미국의 상품 공급망에서 핵심 구실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리를 잃었어요.

"우리는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사측을 물려서게 강제할 최선의 방법은 파업을 더 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주들을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전미제조업협회는 대통령 바이든에게 파업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를 거부했다.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 파업을 중단시켰다가 역풍을 맞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항만 노동자들은 운송을 지연시키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화물 하역은 적체되고 수출 상품은 항만에 쌓

이게 될 것이다.

이번 파업은 항만 부문의 수입이 급등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이 부문은 2020~2023년 동안 4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팬데믹을 거치며 운송료가 치솟았고, 항만 노동자들은 팬데믹 내내 일을 했다.

ILA 위원장 해럴드 다겟은 항만 기업주들을 이렇게 비판했다.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은 매일 일터에 나와야 했고, 저들은 때부자가 됐다.

"우리가 저들에게 돈을 벌어들였다. 저들은 그 돈을 우리와 나누지 않

려 한다."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은 서부 항만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한참 뒤쳐져 있다. 서부 노동자들은 초임이 시급 40달러로, 동부 노동자 최상위 시급인 39달러보다 높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이 상황을 바꿀 것이다.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끝나면 조합원들은 합의안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이번 파업은 항만 노동자들이 미국의 상품 공급망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는 것도 보여 줬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게는 힘이 있다.

이번 파업의 영향을 받은 항만들은 미국 전체 수출입 선적 컨테이너의 절반 이상을 취급한다.

파업 동안 컨테이너 약 10만 개가 항만에 묶여 있었다. 한 연구소는, 항만 노동자 파업이 1주일 지속되면 미국 경제가 입을 손해가 21억 달러에 이르고, 해운·항만 등 운송 기업들의 수익은 4억 달러 줄어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 병목을 쥐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힘이 있음을 보여 준다.

토머스 포스터

출처 Thomas Foster, 'US dockers are victorious as strike disrupts shipping' (2024. 10. 7) / 번역 김준호

이스라엘에는 무기 수출, 레바논에는 보류?

이스라엘군의 인종학살 지원하는 윤석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근 대(對)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 진보당 등이 무역협회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자료를 이용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학살이 시작된 이후로만 최소 18억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했다.

지난해 10월 이미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700억 원이 넘는 무기를 수출해 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진보당 자민통위원회의 논평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이런 무기 수출을 감추는 방법은 "유엔 무역통계에서 대한민국 무기류(총·포탄 등)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중동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친서방 외교·안보 노선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7월에도 이스라엘 정부와 공동으로 '2024년 한국-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한국에서 열고, 이스라엘의 주요 군수기업과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대규모 행사를 연 바 있다.

한편, <서울신문>은 10월 9일 한국의 유명 군수기업 풍산이 레바논 군에 포탄을 수출하려고 8월에 방위사업청에 수출 허가신청을 낸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우방국, 즉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는 공격 무기를 적국에 쥐여 주는 것이라며, 이 수출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레바논에서는 8월 이후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됐다. 레바논에 공군이 없는 점을 이용해 마음 놓고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며 학살을 벌이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확전 국면에서 레바논 군은 이스라엘의 침

▶ 15면으로 이어짐